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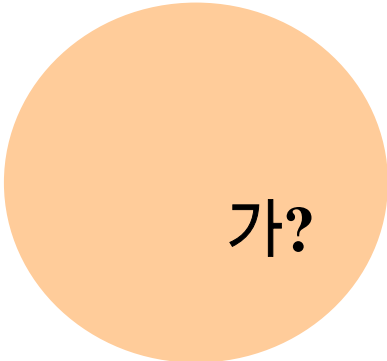
# 이슈 리포트

71

2005년 2월 셋째주(2/21 ~ 2/26)

## ◎ 주요내용

- |            |                      |
|------------|----------------------|
| - 세상돋보기:   | 화투도 기량이라고 하면 어쩔셈인가   |
| - 노동자 세상:  | 노동부 “시장반응? 그때그때 달라요” |
| - 통신정책:    | KT, 와이브로 주파수 고르기 힘들네 |
| - 정자동 6층에서 | 참여정부 노동정책 수정불가능한가?   |
| - 만화방      | 시사만화                 |



참으로 희한한 논리를 읽었다. 서민들 몇 천원 내놓고 고스톱치는 것을 덮쳐서 도박죄로 끌고갈 때는 언제고, 8억여원 상당을 '판돈'으로 걸고 내기 골프 친 사람들에게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한다. 역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란다. 이젠 도박도 유전무죄인 시대인가 보다.

통념이 굳어지면 관습이 된다. 우리는 통념상 상례에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판돈을 걸고 화투와 같은 오락을 즐기면 도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도박이란 통념을 뒤집는 '관습'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가는 근거는 법인가, 한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 척도인가?

앞으로 우리는 법관이 만든 통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준칙을 지배하는 관습이 된 셈이니까 말이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homo mensura)라고 할지라도 사회 규범상 지켜야만 할 일정한 객관적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희한한 판결을 내놓은 재판부의 해괴한 논리에 따르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문을 보면 재판부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내기골프가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논리를 따져보자.

**(1) 내기골프가 도박이다(대전제)**

(1.1) 도박의 정의 - 도박이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한다.

(1.2) 운동경기의 정의 - 운동경기란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보충 1.2.1) 골프는 우연에 지배되지 않으므로 운동경기이다.

(보충 1.2.1.1) 만일 (1.2.1)이 성립한다면, 역으로 골프가 우연에 지배된다는 것이 성립한다면 '골프는 운동경기가 아니다'도 성립되어야 한다.

(보충; 1.2.1.2) (보충 1.2.1.1)로부터 그렇다면 골프도 도박이다.

(1.2.2) 내기골프는 운동경기이다.

(결론) 그러므로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

(여기서 보충은 필자가 한 것)

이 논변에서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는 이것이다.

재판관의 논증에 따르면 (1.1), (1.2), (보충; 1.2.1)로부터 (1.2.2)가 따라나오고 (결론)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다.

그러나 (보충; 1.2.1)과 (보충;1.2.1.1)이 성립된다면 (보충; 1.2.1.2) 즉 '골프도 도박이다'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 결론을 보이기 위해서는 '골프도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어쨌든, 이 논변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귀류법이란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 택하는 '간접증명법'이다.

재판관은 먼저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과 정반대의 주장('내기골프는 도박이다')을 대전제로 내세운다. 이 전제로부터 논증을 구성해 가면서 논변의 대전제와 모순된 주장을 이끌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적 전략을 쓰고 있다.

이 논변에서 논증자는 도박과 운동경기를 규정한다. 도박의 승패는 결정적으로 '우연'에 좌우되지만 운동경기는 우연이 아니라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정의들도 상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우연이란 무엇인가? 운동경기도 '우연'과 '운'이 경기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린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지난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우리 팀에 졌다고 해서, 우리 팀이 기능과 기량에서 반드시 우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 날 선수의 컨디션, 경기 벌어진 장소, 날씨를 비롯한 기후조건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 기능과 기량 이외에도 '우연' 요소가 운동경기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투를 도박이라고 하자. 화투는 어떤가? '운', '요행', '우연' 요소만이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

일까? 고스톱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카드놀이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우연 요소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여기서 발휘되는 노하우는 화투와 카드를 하는 '기능과 기량'이 아니라는 말인가? 카드 게임을 직업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전문직업인이나 게이머도 있는 세상이고, 이 '기능과 기량'을 가르치는 학과가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가들이 벌이는 도박 게임을 즐기는 관중들은 기꺼이 자신의 돈을 내면서 구경한다.

그렇다면 바둑을 포함한 화투와 같은 게임들과 운동경기의 차이란 무엇인가? 승패를 가르는 '우연·기능·기량'이라는 면에서 이 양자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겠는가? 만일 위의 주장이 성립한다면, 카드놀이도 화투놀이도 운동경기다.

도박과 운동경기를 가리는 기준이 '우연'이 될 수는 없다. 아마도 재판관은 골프가 지닌 도박적 요소를 걱정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을 걱정했다면 도박과 내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운동경기에서의 도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판결의 순서였다.

요컨대, 재판관은 먼저 도박과 운동 경기에서의 '우연·기능·기량'을 먼저 규정해야만 하고, 이 양자 사이에 이 개념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능과 기량'이란 것이 재판관이 내세운 도박 요소인 '우연'과 그리 멀어 보이지도 않는다. 기량보다는 '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어 보이는 골프의 경우는 더 그래 보인다.

(1.2.2)인 '내기 골프는 운동경기이다'. 여기에 내재한 심각한 문제는 '내기'라는 말에 있다. 내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규정을 재판관은 정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판관은 '내기골프'와 '골프'를 동격으로 치부하는 잘못을 범했다.

결국 내기골프와 골프는 다같이 운동경기라는 불명확한 규정을 들어 '내기골프는 도박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내기가 도박'이라면 그리고 (보충 1.2.1.1)이 말하는 '골프도 우연에 지배된다'는 것이 성립한다면 '내기골프'는 운동경기이긴 하지만 운동을 이용한 도박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재판관은 골프가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운동경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을 근거로 '내기'라는 변수가 첨가될 경우에도 여전히 '내기골프'도 운동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기골프'와 '골프'를 같은 것으로 본다. 이를 확대하면 모든 종류의 내기 스포츠는 도박이 아닌 셈이고, 앞으로 누구나 임의로 사람을 모아서 돈을 걸고 하는 내기 스포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내기 축구, 내기 농구, 내기 제기차기. 이제부터 모든 '내기 운동'은 운동이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 성립해야만 한다.

'내기'와 '도박'이 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아무리 큰 액수의 판돈을 걸고 할지라도 말이다. 앞으로 판돈을 걸고 하는 '길거리 농구'가 유행할지도 모르겠다.

골프는 귀족스포츠로 발전했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대중화 되어있고 골프를 하기 위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 큰 땅덩어리와 드넓은 평원이 다 골프장이니 말이다. 더구나 돈을 걸고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 설령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돈을 걸고 골프를 치지 않는다.

지난 번에 골프를 구경하는 갤러리와 골프의 황제라는 타이거 우즈가 1불을 걸고 내기하는 것을 보았다. '내기'란 이렇게 유쾌함을 줄 수 있는 한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역대의 판돈을 놓고 골프를 하는 것은 운동경기가 아니다. 이미 정도를 넘어선 도박일 뿐이다.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가지려는 목적이 아닌 돈을 따고 잃을 때에 오는 그 쾌락과 흥분을 즐기려는 마약과 같은 어떤 것이 바로 '내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기와 도박의 본질을 찾아야 '역대 내기 골프가 도박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화투와 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매개로 하면서 그 놀이의 결과가 운, 요행,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기능과 기량으로 승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논박할 셈인가? 아무리 골프를 교양과목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골프를 치기 앞서 교양을 먼저 배웠어야 하는 세대였기를 바랄 뿐이다.

“ ? ”

사회 양극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 주요 과제로 언급했을 정도다. 국민의 93%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서 보듯,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고질병’이 맞는 것 같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관련 법안 두 개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다. 취약근로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정규법안과 최저임금 개정안이다. 하지만 두 법안을 대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노동부가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이유는 노동시장 반응에 대한 우려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노동소득 분배율’만 첨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단단계 하도급에서 직상수급인(원청 등) 연대책임 부여 등 조 의원 안이 통과되면 기업부담, 영세사업장 사용자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을 대할 때 노동부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일본이 파견을 전면확대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10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파견업종 규제가 급격히 풀릴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면 노동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파견노동자가)급속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차별시정기구, 휴지기간 등 보완책이 있고 향후 여러 가지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보완책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노동부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때 그때 다르다”. 물론 일관성이 있기도 하다. ‘행정편의’적이고 노동계 주장은 안중에 없다는 것.

양극화 해소는 말로 되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처방’과 ‘약’을 제대로 투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시장 반응에 대한 걱정도 일관돼야 한다.

<레이버투데이>



## KT ‘ , ’

20	2.3GHz	가
KT가		
KT	22	
가		
2.3GHz		1
KT	MBN	

와이브로 주파수는 2.3GHz대 100MHz의 범위 중 2.4GHz 무선랜과의 보호대역 10MHz, 와이브로 사업자간 보호대역 9MHz(4.5MHz씩 두곳)를 제외한 81MHz를 3개 사업자가 27MHz(편의상 앞 대역부터 A, B, C)씩 나누어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세 대역의 주파수가 기술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C대역의 경우 뒤쪽의 2.4GHz 무선랜과 간섭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KT 역시 C대역보다 A 또는 B대역의 주파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KT 관계자는 "3개 주파수 대역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C의 경우는 무선랜과의 간섭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A와 B 중에서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서 KT의 고민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간의 인수 합병 및 공동망 구축에 대한 대비

와 함께 사업이 활성화됐을 경우 주파수 대역의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관계를 우선시한다면 B대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A를 선택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B, C를 갖게 된다면 두 회사가 와이브로를 공동으로 할 경우 B와 C 사이의 보호대역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대적으로 KT가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반면 B대역은 A와 C의 중간이기 때문에 양쪽 대역과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사업이 활성화돼 정통부가 신규 주파수를 확대한다고 해도 새로 배정받은 주파수와 기존 주파수가 동떨어진 상황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A가 더 유리해 보인다. A의 앞쪽 주파수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섭현상도 적고, 서비스 활성화시 신규 주파수대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즉 만약 주파수가 확대된다면 A를 선택한 곳은 2.2GHz 대역의 후반부와 2.3GHz 대역의 전반부를 이어서 사용해 폭넓게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KT가 A를 선택한다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연계에 대해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즉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쟁사끼리의 공동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B대역을, 사업활성화시 주파수 확대를 고려한다면 A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지 고민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KT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합병할 경우 두 회사의 주파수 중 하나는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A대역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한 보험으로 주파수 반납 주장을 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달말까지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사실상 KT의 선택여부에 따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주파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KT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KT는 예정대로 22일 오후까지 주파수를 선택해 정보통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 가 가?

가

가

"여론의 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경제계가 세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어느새 떠올리기도 민망스러운 '추억'이 되었다. 용근 2년 전이다. 대통령 취임을 앞둔 노무현 당선자가 오전에 한국노총을, 오후에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두 노총 사무실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거니와, 기득권세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발언이었다. 부자신문이 '좌시'할 리 없었다. '친노(親勞)정책'이라느니, '노동자 편향'이라느니 부라퀴 논평이 곰비임비 이어졌다.

### 희미한 추억의 그림자 '친노동자 정부'

그러나 보라. 2년이 흐른 오늘, 언제 그런 소리가 있었나 싶지 않은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우향우'로 줄달음질 쳤다.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리라는 전망도 환상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이 약속한 '토론공화국'도 희미한 추억이 된지 오래다.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 으레 지청구가 나온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노무현은 본디 진보가 아닌데 무리한 요구"라고 도끼는 흠뜨는 사람

도 있다. 더러는 필자를 이상주의자로 몰아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필자는 노 대통령이 진보정책을 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진보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게 결코 아니다. 필자의 비판은 노무현 바람이 불던 시절, 그리고 후보시절 공약에 근거했을 따름이다. 이상이 아니라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두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초심'을 잃은 것은 노 대통령이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당선자 시절 노 대통령은 "언론의 논조, 부수, 칼럼, 논문만 봐도 압도적으로 경제논리가 우세하다"며 "사회적 역학관계상 저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노동과 서민에 대한 처음 관심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별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 힘의 불균형을 잡아나가겠다"고 사뭇 다부진 결기를 밝혔다.

2년이 흐른 오늘, 스스로 경계했음에도 "사회적 역학관계상 역대 대통령들처럼 노동과 서민에 대한 처음 관심이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노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두 노총을 방문한 그 자리에서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다.

### '여론 불균형 해소' 기억이라도 하는가

하지만 보라.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노동부와 김대환 장관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전히 연구력 부린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아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강행처리 못한 상황에서도 자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다. 아직도 노 대통령에 '기대'가 남아있느냐는 힐난을 무릅쓰고 묻는다. "여론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기억이라도 하는가. 기실 한국 사회에서 노사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에 5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2년이 지났다. 마지막 1년 반은 어떤 개혁정책도 펴기 어렵다. 그렇다면 힘의 불균형 시정에 나설 시간은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노사관계의 불균형 해소'와 '경제 성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두 과제는 오히려 긴밀하게 이어져있다. 그래서다. 취임 두 돌을 맞는 노 대통령에 묻는다. 정치인 노무현의 노동정책은 과연 배제로 일관할 것인가. 참여정부에 정녕 참여는 없는가.

만

화

방

